

노사관계 동향

노사분규 동향

◆ 근로손실일수, 전년동기보다 큰 폭 증가

○ 2006년 11월 23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보다 대폭 증가함(표 1 참조).

－ 분규발생건수는 130건으로 전년동기의 165건보다 다소 줄어들으나, 근로손실일수는 1,168,962일로 전년동기의 787,937일보다 크게 증가함.

〈표 1〉 노사분규 주요 지표 동향

(단위: 개소, 명, 일)

	2004. 11. 23	2005. 11. 23	2006. 11. 23
노사분규 발생 건 수(개소)	451	165	130
근로손실일수(일)	1,151,170	787,937	1,168,962

주: 당해 연도의 누적치이며,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.
자료: 노동부.

노동정책 동향

◆ 비정규직 관련 법안, 국회 본회의 통과

○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‘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’, ‘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’,

‘노동위원회법 개정안’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처리

- 차별금지규정이 신설되어 기간제와 파견,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이 가능해졌고, 시정 명령 불이행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.
-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,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자부터는 2년 이상 초과 사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함.
-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가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됨.
- 파견 근로자도 2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무가 적용되고 파견금지업무에 파견되었다라도 고용의무가 적용되게 함.

◆ 비정규직 대상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

○ 정부는 11월 23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

- 이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간 100만 원, 5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능력개발지원제도임.
-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, 파견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, 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도 포함되고, 중도에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.
-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카드를 교부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.
- 지원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 이상, 총 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기관에 확인한 후에 수강하면 되며,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이 직접 노동부에 청구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부담은 없음.

○ 이와 함께 서울·경인지역의 공사금액 20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「고용보험전자카드제」를 점차 확대하여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임.

-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「전자카드 방식」으로 신고하는 사업주에게 전자카드리더기 구입비용(실비)을 지원하고, 신고

- 실적(근로자수)에 따라 월 30만~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.
- 「전자카드 방식」이 완비되면 건설일용근로자별로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근로 내역이 확인되므로 건설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수혜 혜택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.

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

◆ 민주노총, 두 차례 총파업 진행

- 민주노총은 4대 핵심과제 관철을 위한 총파업을 11월 15일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
 -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4대 핵심과제는 로드맵 입법저지 및 민주화 입법쟁취, 한미 FTA 협상저지,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,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 등임.
 -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11월 15일에는 5만 6천여 명(민주노총 집계 14만 5천여 명), 11월 22일에는 5만 8천여 명(민주노총 집계 20만 6천여 명)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함.
 - 이와는 별도로 한국노총은 11월 25일, 약 2만여 명(노동부 집계, 한국노총은 8만 8천여 명 주장)이 참석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9·11 노사정 합의대로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을 주장
 - 경총은 민주노총의 파업이 불법적인 정치파업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엄정대처를 요구함.

◆ 경제5단체,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건의

- 경총 등 경제5단체는 국회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60%에서 40%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「국민연금법 개정(안)에 대한 경제계 의견」을 건의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우선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(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)을 60%에서 40%로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
 -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과약 미비와 소득축소 신고로 인해 직장

-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방식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
- 또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, 퇴직연금 등과 함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도모해야 함.
 -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 등 기존 제도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조세방식 기초(노령)연금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.
 -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보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으므로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

◆ 비정규직 법안 통과 관련, 양대노총 및 경총 엇갈린 반응

-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, 경총은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임.
 -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법은 실제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이라 주장하며, 이 법안의 무력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 선언
 - 반면 한국노총은 동 법안이 한국노총의 최종 요구안에는 못 미치지만,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최초의 보호법안이라는 사실에 최소한의 의의를 두고 미흡하나마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
 - 한편 경총은 비정규직 관련법은 기업의 인력운동을 심대히 제약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어 향후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 법안이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노사정 모두 수용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촉구함.

주요 노동일지

(2006. 10. 20~11. 19)

년·월·일	노동정책	노사단체	기업 및 노동조합
2006. 10. 20			· 효성 창원공장: 사측 1,2,4,5공장 (19일) 직장폐쇄에 이은 3공장 직장폐쇄
10. 22		· 민주노총: 「비정규직 철폐, 특수고용노동자성 쟁취, 원청 사용자성 인정, 삼인정권 퇴진, 총파업 투쟁승리를 위한 전국 비정규노동자대회」 개최	
10. 23		· 민주노총: 한미FTA협상 저지 80만 조합원 사이버 실천의 날(~24일), 제주도 원정투쟁, 전국 동시다발 지역집회 및 대국민선전전(~27일) · 한국노총: 한미FTA저지 제주원정투쟁 및 범국민대회 참가 · 금융노조: 제16차 산별교섭	· 효성 창원공장노조: 창원지역 일대 조합원 집회 개최
10. 24		· 민주노총: 총파업 찬반투표(~11.3일) · 금속노조: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· 금융노조: 제17차 산별교섭, '06년 임단협 합의	
10. 25		· 민주노총: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결의대회 및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	· 효성 창원공장노조: 「직장폐쇄 철폐·성실교섭 촉구·효성자본 규탄 결의대회」 개최
10. 26	· 최저임금위원회: 「최저임금 이행 효율화 방안」 토론회 개최 · 민주노총: 「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」 토론회 개최	· 민주노총: 「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정부대책 발표 관련」 기자간담회 개최 · 보건의료노조: 영남대의료원 집중투쟁 전개(~27일)	
10. 27	· 한국노동교육원: 「노사관계 재정지원사업 발전방안」 토론회 개최	· 민주노총: 총파업 찬반투표(~11.3일), 「특수고용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외면한 정부발표」 규탄 기자회견 개최 · 한국노총: 임원 산별대표자회의	
10. 28		· 민주노총: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대회 개최 · 공공연맹: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· 4대 보험 공대위: 사회보험 줄속통합 저지 결의대회	
10. 30		· 민주노총: 지도부 지역 및 현장순회 및 화물·덤프·레이콘 공동기자회견 개최 · 한국노총: 상임집행위원회 개최 · 보건의료노조: 총파업 찬반투표(~11.3일)	

년·월·일	노동정책	노사단체	기업 및 노동조합
10.31		· 민주노총: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· 철도사업노련: 정기대의원대회	
11. 1		· 민주노총: 총파업 찬반투표(~14일)	
11. 2	· 민주노총: 「복수노조가 한국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」 토론회 개최	· 금융산업노조: MOU 폐지와 자율 경영쟁취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규탄집회 개최	
11. 6		· 민주노총: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한미FTA 농성 참여 · 한국노총: 산별대표자 워크숍	
11. 7	· 한국노동연구원, 한국 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,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: 「산업 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제도」 토론회 개최	· 민주노총: 비정규확산법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및 「공무원 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탄압 규탄」 기자회견 개최 · 한국노총: 시도지역본부의장단 회의	· 효성 창원공장: 임단협 교섭 재개 · 한국철도공사: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
11. 8	· 보건의료산업노조: 「노사관계로드맵 필수 공익사업장노동기본권 대국회」 토론회 개최	· 한국경영자총협회: 「민주노총 11.15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」 발표 · 보건의료노조: 결의대회 개최	
11. 9		· 민주노총: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· 전국건설운송노조: 「덤프·레미콘 11.12 총파업 돌입」 기자회견 개최	
11.10		· 민주노총: 「총파업 돌입 입장 및 일정발표」 기자회견 개최	· 효성창원공장: 임단협 교섭
11.11	· 민주노총: 「노조운동의 새로운 국면, 산별노조의 전망」 토론회 개최	· 민주노총: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	
11.12		· 민주노총: 총파업 선포 전국노동자대회	
11.13		· 민주노총: 전국운송산업노조 전환 찬반투표 실시 및 건설운송노조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개최 · 한국노총: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독려 지역본부, 지부, 단위노조 순회 실시(~17일), 제36주기 전태일 추도식	
11.14		· 민주노총: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완료 및 전국 15개 지역본부별 총파업 기자회견 개최	
11.15	· 한국노동연구원·노동부: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」 개최	· 민주노총: 경고파업 및 전국 동시다발 지역별 총파업 집회	
11.17		· 민주노총: 15개 지역본부,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및 권리보장 입법 쟁취 결의대회 개최 및 전국운송산업노조 산별전환투표, 가결	· 효성창원공장: 임단협 교섭 · 대구지하철공사: 임단협 잠정합의한 찬반투표

